



도의회 광장

2021
09
제 77호

발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13 | 전화 064)741-2285 | 팩스 064)741-2239 | www.council.jeju.kr ISSN 2671-9754

02

제398회 임시회 폐회



04/07

주요 이슈



08

생생 의정활동



09/11

함께합시다



12

사무처 소식



추석...작년 이어 올해도 코로나19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가족들과 터놓고 함께 할 수 없는 명절이 다가왔다.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맛아간 지 오래지만 그나마 다행인 것은 희망이 보인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잘 참아왔고, 조금만 더 힘을 내자. 그리고 마음만큼은 넉넉한 추석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 가을빛 조용히 녹은 추자도에서

제주도·교육청 코로나 추경 가결...신속집행 촉구

제398회 임시회 폐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좌남수)는 9월 7일 열린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달 26일부터 13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398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린 제39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는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정부의 희망회복자금지원 시 영업제한 기간이 1~2일 모자라 장기유형으로 피해 지원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들에 대하여 제주도가 추가 지원할 것을 부대조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어 제주도교육청이 제출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세출부분에서 학교체육시설 여건 개선 등 사업에서 41억8천500만 원을 감액한 뒤 이를 교육환경개선 등 사업에 증액하고, 나머지는 도교육청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8건을 비롯해 동의안 41(명예도민 31), 결의안 3, 의견제시 1, 청원 1, 기타 2건 등 총 72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개회사

“추석 연휴, 코로나19 방역 잔뜩 긴장해야”

제398회 도의회 임시회 폐회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좌남수 의장은 9월 7일 열린 제398회 임시회 폐회사를 통해 “도민들께서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고 편안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방역 긴장감을 늦추지 말아야겠다.”고 당부했다.

좌남수 의장은 “지난 8월 한 달 동안 코로나 확진자가 누적 인원만도 860명으로 역대 최다였다.”며, “코로나 4단계마저 연장되면서 확산세는 줄어들고 있지만, 곧 추석 연휴가 다가오고 있어 감염확산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다가올 추석 명절을 맞아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부 완화되지만, 도민들께서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고 편안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방역 긴장감을 늦추지 말아야겠다.”고 당부했다.

좌남수 의장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 일반회계에서 처음으로 100억 원을 전출하고 있는 관광진흥기금의 고갈 우려는 코로나 원인보다는 원칙 없는 기금운용의 문제가 더 크다.”며, “코로나로 인해 양극화되고 있는 관광업계의 피해 지원과 관광 위기 극복 재원인만큼 기금 목적에 맞도록 운용을 개선하고 재원확보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좌남수 의장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또한 코로나 4단계로 폐업까지 몰린 소상공인을 위로하기에는 불충분하다.”며, “도내 2만5,000여 중소기업

에게 재난관리기금을 추가 지원하도록 예결위 계수 조정을 했지만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 지원은 매우 부족한 실태로 세제감면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국가 재난지원금의 지급대상 또한 당초 예상보다 적은 도민의 84%만 해당될 것으로 보여 지원금에서 제외되는 도민들에게도 상대적 박탈감이 생기지 않도록 도민들의 마음을 우선 보듬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좌남수 의장은 이어 “행정안전부가 전국 272개의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결과를 발표했다”며, “행안부 평가결과, 제주도 상하수도본부(광역상수도)가 전국 최하위인 ‘라’ 등급을 받았고, 제주도개발공사, 제주에너지공사, 제주관광공사 역시 하위권인 ‘다’ 등급을 받았다.”고 말했다.

좌남수 의장은 “올해는 코로나 대응 평가지표가 포함돼 코로나 위기극복 노력도 평가했지만 4개 기관 모두 하위 등급을 받은 것은 코로나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방공기업으로서 과연 지역에 기여하고 있는 것인지 그 존재 이유를 묻고 싶을 정도”라고 비판했다.

또 “도민들도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투자 대비 성과를 믿고 맡겼지만 오히려 실망만 안겨주고 있다. 막대한 혈세 투입에도 경영성과는 저조하고 각



종 비위 의혹이 발생하는가 하면 늘어나는 재정지원으로 도의 재정건전성마저 위협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차제에 지방공기업뿐만 아니라 도 산하 13개 출자출연기관 모두에 대한 경영실태를 철저히 재점검해 방만한 경영과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관 설립 목적에 맞는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추가 지원 조건 추경 통과
예결특위, 제2회 추경예산안 원안 가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호형)는 정부의 희망회복자금(5차 재난지원금) 지원 시 영업제한 기간이 1~2일 모자라 장기유형으로 피해지원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들에 대해 제주도가 추가 지원할 것

을 조건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가결했다.

지난 8월부터 지급되고 있는 정부의 희망회복자금은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피해 업종에 대해 단

기와 장기피해로 구분해 200만 원에서 2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제주의 경우 영업제한 기간이 1~2일 모자라 단기피해 유형으로 분류되어 업소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의 지원을 덜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는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이들 소상공인들(희망회복자금 대상자)에 대해 제주도에서 지원금 최대 50만 원을 추가 지원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제주도의 2차 추경 규모는 3,237억 원이며, 이중 상생국민지원금이 1,575억 원으로 48.7%의 비중을 차지했다. 이중 소상공인 지원 규모는 170억 원으로 5.2%의 비중을 차지하지만, 2차 보전 등 간접 지원 114억 원을 제외한 직접 지원은 56억 원으로 1.7%에 그친다.

이에 2회 추경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도의원들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부족함을 계속 지적했다.

박호형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코로나로 인해 가장 광범위하고 가장 깊은 타격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의 실질적 지원책이 필요하다.”며, “도와의 충분한 논의를 거쳤으며 대략 25,000여 개소의 소상공인들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밝혔다.

5분 발언

“제주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 담당 조직 확대하라”

송창권 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송창권 의원(사진·외도, 이호, 도두동·더불어민주당)은 9월 7일 열린 제3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추진단 조직 확대·강화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제주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의 핵심은 기존 13만 톤 처리도 하면서 지하화 공사를 해야 하기에 대

한민국 최초의 무중단 공법을 시도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며, “안타깝게도 지난 8월에 턴키 방식의 시설공사 입찰공고에서 입찰 참여 건설사가 한 곳도 응찰하지 않아서 유찰됐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22만 톤 규모의 ‘무중단 공법’으로 계획돼 추진됐던 현대화사업이 거의 없었던 것을 감안한다면, 적정공사비와 적정

공기 확보 등에 대해서도 보다 더 면밀히 살펴봐야할 것”이라며, “첫 삽을 뜰 업체가 없는데 시설의 지하화, 지상의 공원화가 실현되겠느냐”고 의문을 표했다.

송 의원은 “결론적으로 제주도정에 강력히 주문한다.”며, “지역주민의 마음을 한데 모으고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전담 조직이 구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화월드 프리미엄 전문점, 균형발전 기회 될 것”

조훈배 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조훈배 의원(사진·안덕면·더불어민주당)은 9월 7일 열린 제3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지역 주민과 소상공인 그리고 신세계사이먼, 나아가 제주도민과의 상생을 전제로 제주 프리미엄 전문점 개장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제주 신화월드 내 대규모 점포 제주 프리미엄 전문점은 2020

년 11월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을 신청하고 오픈을 위한 준비를 진행해 왔다.”며, “이 과정에서 제주도 상인회와 운영시간 자율조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돼 사실상 사업이 중단돼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제주 프리미엄 전문점 개설을 통해 안덕면, 대정읍, 한경면 등에 새로운 상권을 형성시키고, 이

로 인한 정주 여건 개선으로 인구 유입을 확대시켜 제주 서부권 발전을 통한 제주도의 균형발전을 꾀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제주 프리미엄 전문점이 제주에 들어서는 것을 전향적으로 받아들이고, 제주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건설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원해 달라.”고 말했다.

“서귀포시 현혈의 집 재개소, 서둘러라”

김용범 의회운영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용범 의회운영위원장(사진·정방, 중앙 천지동·더불어민주당)은 9월 7일 열린 제3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서귀포시 현혈의 집 재개소가 빠른시일 내에 실현될 수 있도록 도정과 서귀포시가 적극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인 1999년 12월 서귀포시에 ‘현혈의 집’

이 설치됐다.”며, “그러나 당시 현혈 인원 급감으로 관리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2002년 2월, 2년만에 전격 폐쇄됐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고 2010년 이후 지속적인 인구 유입으로 그 당시와 비교하면 서귀포시의 잠재적 현혈수요는 급격히 증가해 왔다.”며, “서귀포시민의 현혈의 집 재개소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도 이어져 왔

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저는 거창하게 대규모 사업에 예산을 투입하라는 것이 아니다. 도로를 놓고, 대규모 시설정비를 해 달라는 것도 아니다.”라며, “서귀포시 현혈의 집 재개소가 빠른시일 내에 실현될 수 있도록 도정과 서귀포시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내년 제주 농업 예산 올해보다 1.5배 이상 확보 절실”

강성균 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성균 의원(사진·애월읍·더불어민주당)은 제3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는 내년 예산 편성 시 농업분야 예산을 올해보다 1.5배 이상 확보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강 의원은 “현재 외국산 농산물의 무차별적 수입이 이뤄지고 다른 지방에서도 제주에서 생산해온 농산물이

재배되면서 제주농업의 특화성이 사라지고 있다.”며, “이러한 시점에서 제주농업의 미래를 새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영세성과 인력 부족, 재배 품목의 단순화 및 천수(天水) 발농업의 어려움을 해소해야 한다.”며, “농가 부채에 대한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제주농업이 지금까지와는 다

른 차원에서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며, “이러한 것은 농업인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행정의 선도와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예산의 뒷받침을 주장했다.

강 의원은 “농업의 구조개혁을 위해 내년도 농업예산을 올해 예산 대비 1.5배 이상 확보해야 한다.”며, “제주농업을 위해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 대행께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4·3특별위원회

4·3특위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 가결

내년 6월 30일까지 활동 연장

4·3특별법 전면 개정 이후 배·보상 문제 등 4·3 문제의 지속적인 해결을 위해 4·3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연장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9월 7일 제3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강철남 의원(연동을,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4·3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을 재석의원 41명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여·야 의원 12명이 공동 발의로 힘을 실었다.

결의안은 오는 10월 15일 만료되는 활동기간을 2022년 6월30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다.

활동기간을 연장해 △4·3특별법 개정안 후속입법 조속한 마련 촉구 △후속입법에 따른 조례 개정 추진 △4·3 관련 각종 기념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등의 활동을 해나갈 계획이다.

강철남 의원은 "4·3특별법 개정 이후 배·보상을 위한 연구용역이 진행됐고, 그에 따른 후속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희생자·유족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교섭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4·3특위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고 '4·3특위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또 4·3특위 위원 중 오영희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이 같은 당 김황국 의원(용담1·2동)으로 변경됐다.

포스트코로나대응 특별위원회

1년 미만 기간제근로자 '약정퇴직금' 보장 추진

의회 차원 코로나19 정책 대응



포스트코로나대응 특별위원회(위원장 강성민, 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을, 이하 특위)는 7월 29일

소회의실에서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보장 조례 제정을 위한 전문가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좌담회는 지난 4월 제394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특위 소속 고은실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이 퇴직금 미지급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쪼개기 계약의 문제점을 제기한 이후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린 것이다.

고 의원은 지난 4월 도정질문 당시 "43개 읍면동 기간제 근로자 계약 현황을 분석한 결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꼼수를 부린 사례가 파악된다"며 "도내 기간제 근로자 계약 사항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이 이날 밝힌 이른바 '꼼수 계약' 사례는 ▲근로기간을 1년에서 3~7일가량 부족하게 계약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 ▲상시고용 업무 성격을 갖고 있으나 11개월 근로 계약을 하거나 5개월, 6개월로 나눠 근로계약을 한 사례 ▲1월 1일부터 근로하는 계약서를 작성했으나 퇴직금을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 1월 중순부터 시작하는 근로계약을 다시 작성하게 한 사례 등이다.

특위는 이 같은 조사 결과에 따라 '제주도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1개월 이상, 1년 미만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제주형 약정퇴직금'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남북교류 및 평화협력 지원 특별위원회

새로운 남북교류 협력시대 준비 위한 시동

제주도·도교육청 업무보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남북교류 및 평화협력 지원 특별위원회(위원장 강민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는 8월 25일 남북교류 특위 제3차 회의를 열고,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을 상대로 현안 업무보고를 받았다.

제주도의 남북교류 관련 업무보고에서는 남북교류 협력위원회 활성화, 남북교류협력기금의 100억 안정적 조성 및 기금의 존속기한의 연장 건, 제주형 남북교류협력 5+1 사업의 체계적인 준비를 위한 예산확

보 등 새로운 남북교류시대를 위한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제주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와 통일교육과 관련한 업무보고에서는 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 운영, 남북교류 기반조성 및 네트워크 구축, 제주국제청소년포럼에 북한학생 초청, 학교 평화통일교육 전문성 함양 지원, 학생의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 남북교육교류 등 추진과제와 추진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강민숙 남북교류 특위위원장은 "남북관계 경색으로 남북교류사업의 실질적인 사업은 통일교육 사업이 주가 되고 있다. 도와 도교육청은 도민들과 학생들의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 노력, 북한이탈 주민들

의 문화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지원과 일자리 지원 등 남북한 주민들의 문화 공유와 남북교류의 필요성 등을 일깨울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며 긍정적인 검토를 주문했다.

특위 위원들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통일부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개정(안)의 지방자치단체를 대북지원사업자로 보는 주요 개정내용에 따라 제주도가 남북교류사업의 주체자로서 문화·체육 교류 및 지식·기술이전 교류 등 상호호혜적 사업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농업분야 남북협력사업 원윈(Win-Win) 전략 마련해야



제주의 농업분야 남북협력사업이 단순한 잉여농산물의 공급보다는 제주와 북한의 농업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데 목적을 뒀다 하며,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당부가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남북교류 및 평화협력특별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현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조천읍)은 "남북협력사업에서 제주 감귤을 빼놓을 수 없을 만큼, 제주의 농업이 상징성을 갖고 있다고 본다."며, "이후 남북협력사업이 추진된다는 전제하에 농업분야에 있어서 인도적 도움이 될 수 있는 품

목의 선정과 지속적인 지원 또는 자립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북한에서 농업의 부가가치가 더 높게 평가될 수 있는 만큼, 제주 농업의 강점인 감귤과 월동채소뿐만 아니라 종자산업과 축산분야의 교류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모두 힘든 상황"이라며, "신규 소비시장의 발굴과 먹거리 복지의 관점에서 농업분야 협력사업이 필요한 만큼, 기회가 주어진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행정자치위원회

“제주도 2차 추경 소상공인 배려 턱없이 부족”

직접지원 56억 원, 1.7% 그쳐



제주도가 편성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는 지난 8월 27일

제398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가 제출한 2021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했다.

이날 회의에선 ‘코로나19 국민상생지원금’과 ‘제주형 5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관련 논의가 도마에 올랐다.

코로나19 국민상생지원금은 정부가 전 국민의 88%에 1인당 25만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위원들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소상공인이 가장 피해를 많이 보고 있음에도 이번 추경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강성민 의원실에 따르면 국가 차원의 소상공인 피해지원액은 17조3,000억 원으로 국가 2차 추경 규모 34.9조 원의 50% 수준이다.

또 제주도의 이번 제2차 추경 규모 3237억 원

중 상생국민지원금 관련 예산은 1,575억 원으로 48.7%의 비중을 차지한다. 그중 소상공인 지원 규모는 170억 원으로 5.2%의 비중을 차지하지만, 2차 보전 등 간접지원 114억 원을 제외한 직접지원은 56억 원으로 1.7%에 그친다.

행안부 추산 도내 상생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인원은 58만3,328명으로, 도내 인구 67만5,876명(7월 말 기준)의 84%에 해당한다.

제주형 5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의 경우에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이 미비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제주형 5차 재난지원금은 취약계층, 소상공인, 문화예술, 관광, 지역 상권, 농어가 등 코로나19로 피해를 입거나 소득이 급감한 도민을 대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제주항공 ‘40억 유상증자’ 동의안, 상임위 통과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는 9월 1일 열린 제398회 임시회에서 (주)제주항공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 취득에 따른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고, 이를 원안 가결했다.

제주도는 제주항공이 제주도민 이동권 보장, 관광접근성 개선, 제주지역 브랜드 홍보 등에 기여했고, 향후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보유주식에 대한

미래 가치 등을 고려해 유상증자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배정된 54만9,490주 가운데 40억 원을 들여 약 39%인 21만4,477주를 인수한다는 계획이다.

이 동의안은 지난 31일 열린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강성익)에서도 부대의견을 달고 원안 가결됐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보건의료진 번 아웃...처우개선은 없어”

자체사업 미미, 공공의료 확충 등 주문



코로나19 사태가 2년째 이어지며 보건의료 인력의 피로도가 극에 달한 가운데 이들을 위한 처우개선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대진 의원(동홍동)은 8월 30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398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가 다음달 2일 총파업을 예고했는데, 도내 보건의료 인력도 2년째 희생만 강요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인해 누적된 업무부담으로 우울증, 스트레스 등 심리적 문제가 심각하다.”며, “보건 인력의 70%가 극도의 피로감으로 무기력증에 빠지는 ‘번 아웃’ 현상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된 방역 대응을 할 수 있겠느냐. 제대로 된 처우 개선안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고은실 의원(비례대표)은 “제주지역은 총파업 영향이 크지 않지만 얼마나 힘들었으면 파업 이야

기가 나오겠느냐.”며, “제주도가 파견으로 인력을 채우면 남은 인원들은 더 힘들어진다. 인력 채용을 비롯해 근무 강도를 낮출 방안과 보건의료인력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승아 의원(오라동)도 “국비 5,500만 원으로 코로나 우울 예방 긴급심리지원 사업이 편성됐는데 이는 도민을 위한 사업”이라며, “이번 추경예산안을 봐도 국비 사업 외에 간호인력 등을 위해 제주도가 하는 일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심리치료·힐링 등 일시적인 프로그램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료 확충과 처우 개선에 예산을 투입하고 실행할 필요가 있다.”며, “지난 1년간 보건복지안전위원회가 지속적으로 주문해도 개선되지 않아 답답하다.”고 덧붙였다.

‘코로나 방역 봐주기 의혹 경찰 수사’ 도마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단속 과정에서 제주시청 공무원의 봐주기 의혹이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도마위에 올랐다.

김경학 의원(더불어민주당, 구좌읍 우도면)은 8월 30일 제398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강성우 제주시 복지위생국장에게 “담당 국장으로서 직원이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루된 것에 대해 도민들에게 한마디 하라”고 지적했다.

강 국장은 “사실관계를 떠나 도민 여러분께 염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경찰 수사 대상이 된 것이 참담하다.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음을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주경찰은 제주시청 6급 공무원 A씨가 유흥업소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정황을 포착하고, 비위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환경도시위원회

제주 제2첨단과기단지 환경평가 동의안 ‘제동’

연구시설보다 단독주택 부지 증가 문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추진하는 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제2첨단단지) 조성사업이 제주도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강성희)는 8월 31일 열린 제398회 임시회 회의에서 제2첨단단지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심사보류했다.

이날 심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창권 의원은 “제2첨단단지에 대해 재해영향평가를 받고 변경한 내용을 비교해 봤는데, 연구시설이 더 많아야 함에도 면적이 줄고 단독주택 지역 면적과 중수도 이용은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JDC는 재해영향평가에 따라 저류지를 2개에서 3개로 늘리고, 면적을 2만8205㎡에서 4만7978㎡로

확장하면서, 연구시설 면적을 대폭 축소했다.

이로 인해 재해영향평가 결과가 반영된 토지이용 계획에는 연구시설은 4만2717㎡로 당초 계획보다 약 32.5% 줄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단독주택 면적은 2만6840㎡으로 소폭이지만 오히려 늘었다.

공공사업으로 개발되는 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개발 사업이 민간 사업보다 중수도 비율이 더 낮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희현 의원은 “오는 2022년에 사업을 시작해서 2026년 이후까지도 공사가 이어질 수 있는데 영주 고 학생들에 대한 안전대책이나 학습문제 등에 대한 검토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노선확장, 도민 추가할인 및 우선채용 노력”

제주도가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제주항공에 40억 원을 투자하는 계획이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강성희)는 8월 31일 제398회 임시회를 속개해 제주도지사 제출한 (주)제주항공 유상증자에 따른 출자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출자 동의안은 (주)제주항공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추진하는 2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제주도가 40억 원을 출자하는 내용이다. 제주도는 이번 회기에 제출한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유상증자에 따른 출자금 40억 원을 이미 반영해놓고 있다.

제주도는 이번 유상증자 참여로 △기존 양대 항공사의 독과점 지위 완화 및 항공요금 인상 억제 △제주기점 항공 좌석 확대 △도민 요금할인 △지방세 등 재정적 수입 증대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환경도시위원회는 출자동의안을 처리하면서 “향후 노선 확장, 제주도민 요금 추가할인, 제주도민 우선채용 등에 대해 제주항공과의 협상 시 적극적으로 대응해 도민들에게 이익이 환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부대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제주도는 2005년 제주항공 출범 당시 출자본금 200억 원 중 50억 원을 투자해 주식비율이



25%에 달했었다. 하지만 이후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지분율이 3%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체육 분야 확대”

855억 원 그쳐, 종합계획 반영 노력해야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안창남)는 제398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안)에 대해 체육 분야가 제대로 다뤄지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날 위원들은 “제3차 종합계획에 체육 분야가 부족한 것 같다.”며, “제주특별법 제140조에 의해 종합계획이 수립되는데 제1항부터 18항까지 ‘체육’이라는 단어가 없다보니 무관심한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어 “다행스럽게 3차 종합계획이 행정위에서 상정 보류됐다.”며, “도의회와 체육 관련 제주도청 주무국이 계획에 담을 수 있는 것을 논의해보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2차 종합계획에 체육 분야가 1,600억

원가량 반영됐는데 3차 계획에는 855억 원 정도”라며, “그나마 용역진이 절반 정도 집어넣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특히 “체육은 관광연계가 가능한 ‘굴뚝 없는 산업’이라며, “다른 분야는 ‘장’인데 스포츠는 ‘절’이다. 이렇게 등한시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위원들은 “종합계획을 통해 예산이 많이 반영된 상태에서 제주체육 5개년 계획이 나와야 하는데 거꾸로다.”라며, “3차 종합계획이 미숙하다. 현재 상정 보류 상태인데 체육을 어떻게 담을지 고민해야 한다. 그래야 제주체육 5개년 계획이 나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로나 문화예술예산...장르별 차이 커

공연사업비에 집중

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9월 1일 열린 제398회 제2차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코로나 대응 공연예술 사업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추경에 반영된 문화예술활동지원 예산은 양 행정시를 포함하여 3건에 7억4,800만 원이 반영됐으나, 모두 공연사업비로서 다른 장르에 대한 어떤 예산편성이나, 집행에 대한 계획이 없는 상황이다.

오 의원은 “예산집행은 행정절차가 끝나는 10월 중순 이후부터 가능하다.”며, “추석, 겨울 등 코로나 위기 대한 거리두기 수칙의 완화는 묘연한 상황을 볼 때, 더욱 예산편성에 대해 신중한 면이 있어야 했

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여건을 감안할 때 거리두기 수칙상 정규공연시설 외에는 공연장 이용에 있어 애로점이 있다.”며, “10월 이후는 실외가 아닌, 공연장용 공연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공공연장은 이미 재단에서 연초에 공모 선정된 공연예술이 예정돼 있다.”며, “예산에서 계획하고 있는 마을로 찾아가는 공연은 읍면지역에 공연 시설이 없기 때문에 예산 집행에 있어 애로점이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예산은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공연예술을 지원하겠다는 의도는 좋으나, 집행의 문제



점이 예상되는 바, 지출의 방법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며, “다양한 지원 대상 검토, 실제 공연이 가능하도록 거리두기 단계별 수칙을 변경하는 방법 등 다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농수축경제위원회

향토 중소기업 활성화 방안 모색

제주산 농식품 가공업체 방문

농수축경제위원회 현길호(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조천읍) 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 위원들은 8월 27일 제398회 임시회 회기 중 현장방문 일정으로 제주산 농·수산물을 활용한 식품가공업체를 방문했다.

이날 현장방문은 코로나19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기업운영과 모범적 사회공헌 활동 등을 펼치고 있는 제주향토기업을 선정·방문하게 되었으며, 1차산업 원물을 활용한 가공식품 생산공정을 견학하고 기업의 현황 및 사회공헌 활동, 애로사

항 등을 청취해 제주의 향토 중소기업들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모색하는 자리가 되었다.

현길호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제주의 자원과 원물을 활용하여 성장하고 있는 유망한 향토중소기업들에 대한 지원정책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기업도 제주의 자원을 활용하여 성장한 만큼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사회공헌 활동에도 더욱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코로나19 추경 1차 산업 너무 홀대 아니냐”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제주경제가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가운데 행정의 지원이 소상공인에 집중되면서 1차 산업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소홀하다는 지적

이 제기됐다.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길호)는 제주특별자치도 제398회 임시회 제2차 회의가 열린 9월 1일 제주도가 제출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의원들은 이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강성균 의원(더불어민주당, 애월읍)은 “올해 본예산에서도 농업과 어업, 축산업 등 1차 산업에 대한 예산이 다른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게 배정이 됐다.”면서, “이번 코로나19 지원을 위한 2차 추경에서도 실국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보면 농축산식품국과 해양수산국의 예산안은 거의 늘어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운 도내 소상공인에 대해 지원하는 만큼 어려운 1차 산업 종사자들에

게도 지원이 돼야 하지만 추경에서는 일자리경제통상국의 예산이 30.2%나 증가했지만 농축산식품국은 4.06%, 해양수산국은 1.93% 증가하는데 그쳤다.”면서, “전 도민이 다 어려운데 1차 산업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도 “코로나19 발생 이후 도내 경마장 운영 단축 및 중단으로 인해 경주마 생산농가 뿐만 아니라, 도내 말 산업 전체에 빨간불이 들어온 상황”이라며, “지금까지 코로나19에 따른 지원대책을 살펴보면 일부 말 사육농가에 대해서만 지원이 이뤄지고 있어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도정이 1차 산업에 대한 관심을 더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위원회

위드 코로나, 학급당 학생수 20인 상한 촉구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 조속 통과 결의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의회는 9월 7일 열린 제3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육위원장이 직접 부의한 ‘학급당 학생 수 20인 상한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속 통과 촉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도의회는 결의안에서 “2020~2021년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학교에 제대로 가지 못한 학생 한 명 한 명의 성장을 방치한 해였다. 나이가 어릴수록, 취약계층일수록 코로나 상황으로 인한 학습 결손이 심각해져서, 이는 교육격차로 이어지고 있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넘어 위드 코로나 시대로 진행해 가는 상황에서 미래교육으로 나아갈 수 있는 획기적이고 근본적인 개선방안은 바로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2020년도 기준 학급당 학생 수가 21명이 넘는 학급의 비율은 초등학교 72.3%, 중학교 84.3%,

일반계 고등학교 83.7%”라며 “이 중 31명이 넘는 학급은 무려 1만8146학급으로 전체학급의 8.4%에 배치된 학생들이 초과밀 학급에서 옆 친구들과 부대끼며 학습과 생활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 공교육 앞에 놓여진 학생들의 기초학력 문제를 해결하고, 교육 불평등 해소를 위한 개별화 맞춤교육과 촘촘한 학력신장 지원, 감염병으로부터 학생안전이 담보된 등교수업 보장, 2025년도에 전면 도입되는 고교학점제 정착을 위해서도 반드시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주도의의회는 “학교방역, 교육격차 해소, 기초학력 해결, 돌봄 등 OECD 선진국으로서의 지위와 역량 걸 맞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다짐한 뒤 거듭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법안의 조속히 입법을 촉구했다.

이날 채택된 결의안은 청와대, 국회, 교육부, 기획재정부, 전국 시·도의회 등에 전달된다.

교육자치 15년 성과와 과제, 연구용역 추진 ‘환영’



교육위원회(위원장 부공남)는 8월 26일 제주도교육청에서 제주교육자치를 진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게 되는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제주 교육자치 15년의 성과

와 과제,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는 특별자치도 교육자치 15년의 성과를 제주특별법이 부여한 고도의 자치권과 분권 취지에 맞도록 자치입법, 자치조직 및 자치재정 특례 등 세 측면에서 정리하고, 향후 과제를 검토하여 발전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부공남 교육위원장은 “제주 교육자치 15년의 성과와 과제, 발전방안」 연구용역 계약이 체결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앞으로 교육위원회에서는 이번 용역을 계기로 교육자치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안 마련을 위해 도교육청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생생 의정활동

조례소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대진 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대진 의원(사진·서귀포시 동홍동·더불어민주당)이 제39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서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8월 31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체육회 또는 행정시장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단체 및 체육 동호인이 체육활동을 위해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80%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수영장·헬스장·에어로빅장의 경우에는 50%를 감면하되 부대시설은 감면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제22조 제2항이 신설되는 것이다.

김대진 의원은 "그동안 장애인 체육단체와 체육 동호인들이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면서 수입과 지출의 불균형과 코로나블루로 인한 심신의 안정을 위해 체육활동을 더욱 활성화해야 함에도 체육시설 사용료 부담으로 체육활동에 어려움이 있어 체육 시설 사용료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80% 감면조항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해녀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정은 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임정은 의원(사진·대전동, 중문동, 예레동 더불어민주당)은 9월 7일 해녀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 설치 및 운영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임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보존관계 법령 중 「국

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역류지 출신 포로 가족" 및 "등록 포로"에 대하여 관람료의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 해녀박물관의 시설사용료에 대한 반환 규정이 새로 추가됐다.

임정은 의원은 "올해로 한반도에 동족상잔의 비극인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송환된 사람은 국내에 몇천 명 정도일 뿐 북한에 최소한 5만 명 정도가 송환되지 않고 있

다."며, "국군포로 송환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다시금 도민에게 알리고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역류지 출신 포로 가족 및 등록 포로들에게 제주도의 대표적인 해녀박물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람료를 전액 감면하고, 해녀문화센터 공연장 등 해녀박물관의 시설을 사용하려고 하는 개인 또는 단체의 권익 보호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마련된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토론회

안정적인 IB 교육프로그램 운영 위한 제도 마련

강연호 부의장, 부공남 교육위원장

강연호 부의장과 부공남 교육위원장은 안정적인 IB 교육프로그램 운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9월 3일 도의회 부의장실에서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과 정책기획과장이 함께 참여해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강연호 부의장은 "공교육 활성화 방안으로 IB 교육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IB 교육을 공교육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운영에 대한 지속성이 담보되어야 한다."며, "특히, 제주형 자율학교가 특별법에 의해 지속적으로 운영되어 오고 있으나, 과거 제주의 사례를 돌아볼 때 제주형 자율학교의 초창기 모형인 i-좋은학교는 사라지고 현재는 다룬디 배움학교로 전환되는 것을 보며, 지역에서는 과연 IB 교육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것인지에 대한 염려가 많이 있다."고 말했다.

부공남 교육위원장은 "IB 교육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생각을 꺼내는 토론과 학생 중심 수업 및 논·서술형 평가'는 도교육청뿐만 아니라 향후 국가에서도 반영하고자 하는 교육과정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제주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희순 정책기획실장은 "IB 교육프로그램이 공교육 활성화 모델로 정착되고 지속적인 운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에 적극 공감한다."며, "현재 조례 초안에 제주특별법의 자율학교 특례가 잘 반영되어 체계적인 운



영과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IB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제주의 공교육을 혁신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논의된 사항은 법제 검토를 거친 후 11월 회기에서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함께합시다

신기한 제주어 ⑨

불세나다

(형용사) 귀하고 인기가 높아지다

<예문>

“무사 저 집더레 사름덜이 데머들엄신고이?”
 “저집 아들이 서월에서 높은 베슬을 맞젠 훗디다게. 경
 후연 인스후레덜 오람실 거우다”
 “그 아돌 잘도 착후연게마는 뽕번에 불세나게 생겨신게”

‘도의회 광장’에서는 2021년부터 양전형 님의 ‘제주어용례사전①’에 실린 제주말이 600여 예문 속에 쓰이는 용례를 게재합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데미다:데미다	인스후다:인사하다
데머들엄신고이?: ‘모여드는가’의 뜻	오람실:오고 있을
아돌, 아덜:아들	잘도:아주, 매우
서월:서울	착후연게마는:착하더니만
베슬, 베실:벼슬	뽕번에, 뽕박에:한번에
맞젠:맛다고	불세나다, 부세나다:인기가 높아지다
경후연:그렇게 해서	생겨신게:생겼네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연간 의회운영 일정

월별	회수	회 기	의사일정	주요처리안건
계	10회	총142일 · 정례회 2회/47일 · 임시회 8회/95일	본회의 28일 상임위 55일 예결위 22일 공휴일 37일	
2월	제392회 임시회	2.22.(월) ~ 3.4.(목) (11일)	본회의 2일 상임위 6일 공휴일 3일	· 교섭단체 대표 연설 · 결산검사위 원 선임 · '21년도 주요업무 보고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3월	제393회 임시회	3.17.(수) ~ 3.25.(목) (9일)	본회의 2일 상임위 5일 공휴일 2일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현장방문 등
4월	제394회 임시회	4.20.(화) ~ 4.30.(금) (11일)	본회의 6일 상임위 3일 공휴일 2일	·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현장방문 등
5월	제395회 임시회	5.28.(금) ~ 6.9.(수) (13일)	본회의 2일 상임위 4일 예결위 3일 공휴일 4일	·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현장방문 등
6월	제396회 제1차 정례회	6.15.(화) ~ 6.30.(수) (16일)	본회의 2일 상임위 5일 예결위 5일 공휴일 4일	· 결산 및 예비비 승인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현장방문 등
7월	제397회 임시회	7.14.(수) ~ 7.21.(수) (8일)	본회의 2일 상임위 4일 공휴일 2일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현장방문 등
8월 ~ 9월	제398회 임시회	8.26.(목) ~ 9.7.(화) (13일)	본회의 2일 상임위 4일 예결위 3일 공휴일 4일	·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현장방문 등
10월	제399회 임시회	10.12.(화) ~ 11.3.(수) (23일)	본회의 2일 상임위 15일 공휴일 6일	· 행정사무감사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현장방문 등
11월 ~ 12월	제400회 제2차 정례회	11.15.(월) ~ 12.15.(수) (31일)	본회의 6일 상임위 8일 예결위 9일 공휴일 8일	·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 2022년도 예산안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현장방문 등
12월	제401회 임시회	12.17.(금) ~ 12.23.(목) (7일)	본회의 2일 상임위 1일 예결위 2일 공휴일 2일	·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긴급 회의소집, 회기연장 운영 등을 위한 예비일 : 8일

생활 & 법령뉴스 Q&A

Q

폐수배출시설을 운영 중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폐수를 배출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어떤 제재를 받게 되나요?

A

폐수배출시설을 운영 중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폐수를 배출하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다음과 같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① 개선명령 또는 조치명령
- ②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조업정지명령
- ③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 등에는 배출부과금 부과
- ④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허가 취소

■ 배출시설 운영에 따른 제재

☞ 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을 지키지 못하거나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는 제외)에는 시·도지사로부터 개선명령 또는 조치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선명령 또는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해당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기간 내에 이행은 하였으나 검사결과 배출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조업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Q&A



Q

일반국민 A가 국회의원 B에 대해 법률 제 개정을 제안 건의하는 행위는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에 해당하나요?

A

일반국민 A가 국회의원 B에 대해 법률의 제 개정을 건의하는 행위는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14호까지 열거된 부정청탁의 대상직무로 보기 어려워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한편, 청탁금지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청원법,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국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 기준(제2조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공공기관의 규정 사규 기준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절차 방법에 따라 권리침해의 구제 해결을 요구하거나 그와 관련된 법령 기준의 제정 개정 폐지를 제안 건의하는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바, 일반국민 A가 국회의원 B에 대해 법률 제 개정을 건의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면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의원 기고

소상공인 지원 위한 의회·제주도의 협력



지난해 제주지역 경제가 코로나 19와 경기침체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전국에서 가장 피해가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시사해준다. 제주도 또한 코로나19 피해업종 지원 관련 재정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지역 확산 추세를 차단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추석연휴를 포함한 9월 22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소상공인들의 생업 피해 가중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실질적 지원 대책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올해 제2회 추경안에 편성된 소상공인 지원규모는 170억원으로 전체 추경규모 3237억원 중 5.2% 수준이다. 이 중 간접지원 114억원을 제외하면 직접지원 예산은 56억원으로 전체 추경예산의 1.7%에 그치고 있다.

지난날 영국의 경제학자 케인즈는 불황기일수록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지출로 고용을 늘려 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적자재정과 흑자재정을 상황에 따라 활용

하는 '신축성 있는 재정'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사고방식을 창안했다. 즉 실업난, 국가재난 등으로 어려운 시기에는 큰 정부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케인즈의 주장과 비교해보면 재난상황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지원할 예산으로 제주도가 지방채 상황에 대비해 재정안정화기금으로 290억원을 적립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재난상황에서 도민들의 재정수요에 맞게 대응하는 것이 재정운용정책에서 우선이라는 것이다.

올해 제주특별자치도는 재난상황임을 감안해 세출과 관련해서는 재정운용 기본방향을 취약계층 지원 관련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민생경제활성화, 일자리 창출 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민생경제 활성화의 주역임에도 불구하고 우선적 배려를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지자체의 작은 지원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는 큰 희망의 불씨가 될 수 있다. 더불어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제도적 여건개선도 필요하다. 업종별 상황과 확진자 발생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정밀한 방역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 어려운 시기에 고통을 입고 있

는 소상공인들에게 지방세 감면을 추가 지원하는 시책을 추진한다는데 반가운 소식이다. 앞서 지난 5월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재정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기도 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지난 3일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주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소상공인에 대해 제주도에서 지원금 최대 50만원을 추가 지원할 것을 부대조건을 달고 원안 가결했다. 9월 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약 2만5000여 곳의 소상공인들이 추가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바야흐로 급변 제2차 추경에서 의원들이 제시한 다양한 의견들을 전략적으로 수렴하는 집행부의 해안과 조속한 실행이 필요한 시점이다.

강성민 포스트코로나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초당옥수수에서 제주농업의 미래를 보다



초당옥수수, 최근 지역에서 인기 있는 작물이라고 하면 바로 이 초당옥수수를 꼽을 수 있다. 원래 옥수수는 세계 3대 작물 중 하나로 재배가 용이하고 생산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그 용도가 다양해서 전 세계적으로 재배되는 작물이다.

하지만 보릿고개가 사라진 이후, 아이들의 간식 정도로만 치부되어 별 인기가 없었다. 하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 여름에도 초당옥수수가 큰 인기를 끌면서 재배면적이 넓어지고 있다. 대형마트는 물론 길가 좌판에 이르기까지 초당옥수수는 상품대에 가득하고 심지어 동네 마트에는 공급이 딸릴 정도가 되었다.

초당 옥수수의 이런 인기의 비결이 무엇일까?

우선 소비자의 취향에 맞아 떨어졌다. 아삭한 식감과 단맛으로 바쁜 현대인의 대응식으로 충분한 점은 물론 간식으로도 일품이라는 것이다. 소위 하는 말로 '심심풀이 땅콩'이란 말이 있는데 이젠 '심심풀이 초당'

이란 말이 생기게 되었다는 우스개도 한다.

두 번째는 SNS와 유튜브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이다. 시식 콘텐츠를 이용하여 초당옥수수의 특징점을 소비자의 시각에서 쉽게 전달하였고, 도입초기에 일부 가졌던 거부감을 극복할 수 있었다.

세 번째는 재배와 수확 후 관리의 어려움을 기술개발을 통해 잘 극복해 낸 것이다. 초당옥수수는 너무 빨리 수확하면 당분함량은 높으나 알의 발달이 덜 되어 상품성이 떨어지고, 너무 늦게 수확하면 이삭이 잘 발달하지만 당분함량과 맛이 떨어져 상품가치가 크게 떨어지게 된다. 이점을 고려한 재배기술이 한몫을 했다고 할 수 있다. 수확 후 짧은 기간에 유통할 수 있다는 점도 제주지역 농가에게 매력의 포인트가 되었다.

특히, 일반 옥수수에 비해 5배나 높은 가격은 농가의 소득증대에 큰 도움이 된다는 점과 월동채소 재배 농가의 사이작물로 단위면적당 소득과 작부체계면에서 매우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제주를 대표해 온 감귤과 월동채소는 육지에서 농산물 생산이 어려운 겨울철에 수확하고 출

하한다는 장점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 연중 수입되고 있는 외국산 농산물이 있고, 기후변화 등으로 우리 남해안 일대 남부지역에서도 월동채소 재배가 가능해졌다. 필자는 우리 제주 농업이 나아갈 방향을 초당옥수수가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농가 소득을 위해서는 우선 소비자의 기호를 충족시킬 수 있는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어야 한다.

초당옥수수는 농작물의 다양화가 얼마나 농가소득에 도움이 되는가를 보여준 좋은 사례이며, 농업구조 변화의 가능성을 제시한 것이다. 더불어 이제는 단순히 농산물만을 생산하는 농업이 아닌 빅데이터와 AI 등 첨단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농업의 스마트화, 농업인과 소비자의 심리, 작물선택, 재배, 생산, 수요와 공급, 유통, 소비에 이르기까지 농업의 전 과정을 관리하는 시스템도 필요하다. 제주인의 삶, 내일을 위해 제주농업의 발전적 구조개혁을 위한 행정의 투자! 지금 바로 시작해야 한다.

강성균 의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청년정책과 가온머리, 새로운 가치사슬의 창출



아마 독자들이 제목을 읽고 처음 보는 생각은 '가온머리가 뭐지?' 일 것이다. 가온머리는 바로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와 같은 말이다. 일의 전체 과정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나 조직을 뜻하는 컨트롤 타워의 순우리말이 '가온머리'인 것이다. 오늘 컨트롤 타워를 말하는 이유는 행정에서 어떤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거나 당초 계획한 성과를 거두지 못할 때, 그 원인을 대체로, '컨트롤 타워의 부재', 즉 정책의 중심을 잡아주는 조직과 역할이 부족하다고 제시하기 때문이다.

사실 청년정책에 한정하여 보더라도, 청년의 다양한 활동 지원과 관련된 정책은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청년정책담당관이 담당하고 있고, 청년의 일자리와 관련된 정책은 일자리경제통상국이, 그리고 청년의 주거와 관련된 정책은 도시건설국이 담당하고 있다. 그

렇기 때문에 제주자치도의 청년정책 전체를 알고 싶다고 하여, 한 번에 이를 알아낼 수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이들 정책들이 연계될 수 있도록 가온머리, 즉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쉽게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컨트롤 타워가 될 조직을 새롭게 만든다고 해서, 기존 정책이 종합되고 연계될 수 있는가? 단순 조직 신설로는 해결할 수 없다. 사실 조직은 하나의 일관된 정책 범위만을 한정하여 운영될 뿐이다. 청년정책은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설계되어야 하기 때문에 부서 칸막이를 넘나들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정책의 틀을 구상해야 한다.

한 명의 청년이 '제주청년센터'에서 진로·적성 탐색 활동을 하고 난 후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시민사회활동을 하고 싶다면 '제주소통협력센터'의 생활혁신 실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연계되어야 한다. 또 이를 자신의 삶터에서 풀어나가고 싶다면 '제주도시재생센터'의 도움을 받도록 연계되어야 한다. 소관 부서가 다르

다고 해서 한 명의 청년 활동이 끊기거나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기대했던 정책효과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청년정책 사업들을 묶어내 새로운 혁신적 가치사슬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원도심에 위치해 공간적으로도 연계 가능성이 높은 제주청년센터, 제주소통협력센터, 제주도시재생센터의 정책사업을 묶어내는 구상을 시작하고자 한다. 이것이 가능하다면 청년들을 위한 '생애주기적 원스톱서비스 정책 설계'와 '원도심 활성화,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집행기관이 아닌 의회가 무형의 정책을 연계하는 설계를 제도화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그것의 완성을 위해 남은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문종태 의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기고

양성평등... '다름'을 인정하면 그만이다



매년 9월 1일부터 7일까지 일주일간은 양성평등기본법이 정하고 있는 '양성평등주간'이다. 양성평등주간은 남성과 여성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해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일·가정 양립실천을 통한 실질적인 남녀평등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제정된 주간이다.

양성평등주간이라는 용어는 1995년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이 2014년에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기존의 여성주간이 바뀌어 생기게 된 용어인데, 2019년까지는 7월 1일부터 7일까지를 양성평등주간으로 했었으나, 2019년에 1898년 우리

나라 최초 여성인권선언문인 '여권통문(女權通文)'이 발표된 9월 1일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함에 따라, 그 의미를 담기 위하여 지난해부터 9월 1일부터 7일까지를 양성평등주간으로 하게 됐다. 매년 양성평등주간에는 전국의 각 지자체별로 다양한 행사를 마련해 그 의미를 되새기고 있으며, 서귀포시에서도 그 동안 각종 행사를 진행해 왔으나, 올해는 정말 끈질기게도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코로나19로 부득이하게 모든 행사를 취소하게 됐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양성평등이라는 용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 자체로 뭔가 절대적이고 권위적이며 낡은 용어처럼 들리기 때문이다. 그보다는 '양성다름', '남녀다름'이라는 용어를 써보면 어떻

까. 남자와 여자는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는 다르다. 마치 어른과 어린아이가 다르듯이 말이다. 어른과 어린아이는 똑같은 지점에서 달리기를 할 수 없다. 다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바일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남녀간의 다름을 인정할 수 있다면 우리가 현재 흔히 말하고 사회 곳곳에서 느끼고 있는 '남녀차별'이라는 것은 어쩌면 우리 사회에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불필요한 관념이 될지도 모른다. 다름을 인정하자! '양성평등' 어렵지 않다. '다름'을 인정하면 그만이다.

고인석 주무관 /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대상포진 예방백신을 맞아야 하는 이유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연일 뉴스에 나오면서 이와 함께 전반적인 예방접종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요즘같이 아침저녁 선선해진 환절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면역력 관리다. 면역력이 약해지는 시기에 나타나는 다양한 질환 중 하나가 대상포진인데, 주로 신경절을 따라 피부상에 띠를 두른듯한 수포를 만들면서 나타난다. 흔히 갈비뼈나 얼굴 한쪽에 통증이 있는 띠 모양으로 발현되고 많은 사람들이 초기증상으로 환부에 통증이 있거나 타는

듯한 느낌을 받고 열, 두통, 피로를 느끼기도 한다. 시간이 지나면서 발병부위로부터 신경 손상이 심해지며 강한 신경통을 유발한다.

대상포진은 50~60대 등 고령으로 접어들수록 발병위험이 커지고, 고연령층일수록 신경통이 확대돼 합병증까지 앓을 수 있다.

질환 특성상 재발도 잦아 예방차원에서라도 건강할 때 미리 예방접종을 하는 것을 적극 권장한다. 대상포진을 앓았던 유무와 상관없이 1회만 접종하면 된다. 만약 앓았을 경우에는 회복 후 6~12개월이 지난 후에 접종이 가능하다. 예방접종을 했다면 대상포진 발병 시 신경통의 강도가 현저히 낮

아지는 만큼 가능한 권장시기인 50~60세에 접종해두는 것을 권장한다.

코로나 예방접종이 한창 이뤄지는 요즘, 다른 성인 예방접종의 필요성도 함께 대두되고 있다. 코로나19와 같이 관심도가 높은 감염병 뿐만 아니라 평소 생활전반에서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 개인의 건강한 생활 유지를 위해 적기에 올바른 접종을 하자.

고수연 주무관 /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지방의회 부활 30년의 의미와 과제



지방자치란 주민이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각 지역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맡겨 주민의 뜻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제헌 헌법에는 현행 헌법과 동일한 내용으로 지방자치제도가 규정되어 있다.

이후 6·25 발발로 시행이 지연되다가 1952년에 최초의 지방의회가 구성되었다. 하지만 유신헌법 부칙에서 조국 통일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지방의회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고 제5공화국 헌법 부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여 지방의회를 순차적으로 구성하되, 그 구성 시기는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하였으나 법률이 제정되지는 않았다. 제6공화국 헌법에 이르러서야 지방의회의 구성에 관한 유예 규정이 철폐됐고, 1988년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1991년 상반기에 각급 지방의회가 구성될 수 있었다.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실현에 매우 실질적이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주민이 자신의 일상생활 및 복지에 관한 사항을 일상과 가장 밀착된 지역 공동체,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스스로 해결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제헌 헌법에서부터 지방의회를 두도록 규정(제헌 헌법 제97조)하였고 지방의회를 지방자치 실현의 필수요소로 상정한 것이다. 그러나 1961년 5·16 군사혁명으로 지방의회가 해산된 후 30년이 지난 1991년 3월 26일 기초의원 선거가 치러졌고 중단된 기초민주주의가 비로소 부활하였다.

2021년은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30년을 맞는 해이다. 지방분권과 지방자치권 확대를 위한 주민 권한과 지방의회의 기능 강화를 포함하여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었다.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이 법에서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할 주민의 권리를 명시하고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된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의견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민의 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을 따로 정하도록 하고 현재 국회에 법률안이 계류 중이며 일정 기간 내에 지방의회가 의결하도록 하는 등 주민의 조례 발안의 권한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다소 미흡한 면은 있지만 이번 전부개정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민주주의와 정치의 여의도 국회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다. 내가 사는 이곳, 공동체와 생활 터전 안에서 주민의 권리를 되찾고 실현하고자 하는 참여와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느리지만 확고하게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길이다.

김채현 정책입법담당관실 주무관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누리카드로 문화생활을 향유하세요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이란 삶의 질 향상과 문화격차 완화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문화복지 사업이다. 제주에서는 2만4000여명이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아 이용하고 있으며 올해 시행된 자동재충전 제도에 따라 문화누리카드 발급이 조기 마감됐었으나, 이번 문화누리카드 발급 예산 추가 편성을 통해 제주에서는 2000여명이 추가

로 발급 가능해졌다.

발급 대상은 만 6세 이상(201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며 1인당 연간 10만 원이 지원된다. 카드 발급일로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문화·관광·체육 분야의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미사용 금액은 다음연도에 이월이 불가하니 당해연도에 지원금액을 전부 사용하여야 한다.

카드 발급이나 재충전 신청일은 지난 8월 19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다. 대상자는 가까운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문화누리카드 누

리집(<http://www.mnuri.kr>) 및 고객센터(1544-3412)를 통해 신규 발급 및 재충전이 가능하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여러 축제들과 행사들이 줄줄이 취소되어 문화생활을 누릴 기회가 대폭 감소하였다. 경제적 여건 등 문화생활이 힘든 소외 계층들이 문화누리카드를 통하여 다양한 혜택을 누리고, 코로나19로 인해 지친 마음이 힐링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소희 주무관 / 정방동주민센터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 '가속도'

도·의회·국방부 실무협의체 구성 후 MOU 체결키로



제주 알뜨르비행장에 추진 중인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

국회 송재호 의원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좌남수 의장, 이상봉 행정자치위원장, 그리고 알뜨르비행장이 소재한 대정읍 지역구 양병우 의원은 지난 9월 6일 국회에서 국방부 관계자와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부지 무상사용을 위한 논의를 거쳤다.

이날 회의에는 국방부 박재민 차관과 이영수 공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장 등이 참석하여 그동안 제주도가 요구해온 알뜨르비행장 부지 무상사용과 관련하여 전향적인 입장을 밝혔다.

또한, 지역주민이 재해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저류조 시설 등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향후 국방부(공군)와 제주도는 알뜨르비행장 부지 무상사용 추진을 위해 오는 10월까지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세부사항을 논의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은 2005년 참여정부에서 지정한 '제주평화의 섬 제주'실천 17대 사업에 포함되어 2008년 제주도에서 제주평화대공원 조성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총사업비 750억 원을 투자하여 알뜨르비행장 일대에 전적지 정비와 전시관 등을 조성할 계획이었다.

그동안 제주도에서는 평화대공원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알뜨르비행장 무상사용을 요구해 왔지만 국방부와 공군은 대체부지를 요구하며 부정적인 입장으로 사업추진에 진척이 없었다.

좌남수 의장은 "이번 논의가 긍정적으로 진행된 만큼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지역주민의 숙원 해결을 위해 국방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0여 년간 진척이 없었던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이 국방부와 공군이 부지 무상사용에 긍정적으로 입장을 선화함에 따라 향후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무부지사 예정자 인사청문특위 구성 완료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9월 1일 고영권 제주도 정무부지사 예정자의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구성을 완료했다. 제주도의회는 6개 상임위원회별 추천과 의장 추천을 통해 7명으로 인사청문특위를 구성했다.

인사청문에는 고현수 의원(행정자치위원회), 김대진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양병우 의원(환경도시위원회), 문경운 의원(문화관광체육위원회), 김경미 의원(농수축경제위원회), 김창식 의원(교육위원회), 강성균 의원(의장

추천, 농수축경제위원회)이 나선타.

인사청문 특위는 오는 7일까지 진행되는 제398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회의를 열어 위원장 선출하고 인사청문 실시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인사청문은 오는 15일 전후로 열릴 것으로 보인다.

고 예정자가 이미 지난해 인사청문을 거친 만큼 이번 청문의 수준과 방식도 관심사다. 일각에서는 정책분야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염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체계 변경 탄원서



제주해류양식협회 등은 8월 31일 제주도의회를 찾아 좌남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에게 염지하수 원수

대금 부과체계 변경안 추진 철회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

내가 낸 세금,
제대로 쓰이고 있나?
부당한 행정사례 없나?



제399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다양한 의견을 보내주세요!

접수기간 '21. 9. 6. (화) - 9. 23. (목)

내용 행정의 위법, 부당한 행위 시책사업에 대한 개선 건의사항, 불편사항 등

의견제출 도의회 홈페이지 게시판 (www.council.jeu.kr) 도의회 SNS, 우편, 직접 방문 (해당 전문위원회실)

문의처 도의회 공보관 ☎741-2204